

KBA WEEKLY BRIEFING

Korea Business Association Europe

2022.3.28 – 4.1

VOL.306

CONTENTS

I EU TRADE POLICY

- ▶3.28 EU 정상회의, 에너지 시장 개편 불발...에너지 자발적 공동구매 합의
- ▶3.28 EU-미국, LNG EU 수출 확대에 합의...對미 가스 수입국에 영향 우려
- ▶3.29 EU, 에너지효율지침(EED) 개정안의 에너지 효율 목표 강화 추진
- ▶3.29 EU, 해상풍력발전 보조금 관련 차별적 조치에 영국을 WTO 제소
- ▶3.30 EU, 농식품 긴급 운송 위한 '우크라이나-폴란드-발틱해 녹색화랑' 설치 검토
- ▶3.30 폴란드, 러시아 석탄 수입 금지 발표
- ▶3.30 미국, EU 등 동맹과 러시아 중요 산업에 대한 추가 제재 검토
- ▶3.31 EU 집행위, 그린워싱 방지 및 소비자보호 위한 일련의 지침 개정안 제안
- ▶3.31 EU 이사회, IPI 규정 최종 승인...5~6월 경 유럽의회 승인 후 발효
- ▶3.31 러시아, 일부 상품 병행수입 허용 법안 채택
- ▶4.01 EU, 식량안보 우려에 EU 그린딜 농식품 분야 세부정책 추진 잠정 중단
- ▶4.01 EU, 중국과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지원 자재 촉구
- ▶4.01 EU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 역외보조금 규정 타협안 제시

II EU 환경규제 뉴스 -KIST EUROPE 제공

- ▶4.01 EU집행위, 불완전(inactive) REACH 등록 건 등록서류 대상 유효기한 도입 고려
- ▶4.01 ECHA, MWCNTs(multi-walled carbon nanotubes) 발암성 분류 동의

① EU 정상회의, 에너지 시장 개편 불발...에너지 자발적 공동구매 합의

- EU 정상회의는 25일(금) EU 에너지 시장 개편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EU 집행위에 에너지 시장 개편안을 제안토록 요구하는데 합의

- EU 정상회의에서 단기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에 합의한 반면, 장기적 에너지 시장 개편의 이견으로 집행위에 5월까지 에너지 시장 개편(안) 제안을 요구하는데 그침

- 이번 정상회의에서 EU 전력망과 연결성이 낮은 단계이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특수 상황에 따른 '특별한 취급*'에 합의한 점이 주목

* 구체적 내용은 추후 발표 예정

- [단기적 가격안정] 정상회의는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EU 집행위에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 국별 상황에 맞는 가격 안정화 조치 도입을 권고

- 구체적으로 집행위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 완화 관련 통신문'상의 (에너지 지원비 등) 직접지원, 보조금, 세금부담 완화, (전력 등)가격상한, 기타 규제 완화 등을 제시

- [에너지 시장 개편] 정상회의는 에너지 시장 개혁을 위해 EU 집행위에 (에너지) 단일시장 완결성을 유지하며, 에너지 가격 급등 대응 방안을 5월까지 제안토록 요구

- [에너지 가격상한] 이번 정상회의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진 안건으로 지중해 연안 회원국이 요구한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은 독일 등 다수 회원국이 정부의 시장개입이 초래할 장기적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도입되지 못함

* EU 집행위는 정부 개입을 통한 에너지 가격상한제 도입이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인하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

- [가스 공동구매] 정상회의는 가능한 신속하게 EU 가스 비축량 확보 노력에 착수하고, 이를 위해 EU 회원국이 자발적인 가스 공동구매 및 공동비축에 나서기로 합의

- 가스 구입 등은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에서 절적하게 작동하고 있는 점을 강조, 자발적 참여를 요구한 독일의 주장이 수용된 것

② EU-미국, LNG EU 수출 확대에 합의...對미 가스 수입국에 영향 우려

- EU는 25일(금)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150억m³ (15bcm)을 연내에 추가 수입하고, 2030년까지 매년 500억m³ (50bcm)의 LNG를 수입키로 미국과 합의
 - 폰테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완화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LNG를 포함한 추가 천연가스 수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
 - 미국과 에너지 테스크포스를 구성,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 완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제고 등에 협력, 연간 1,550억m³ (155bcm)로 EU 수요의 45%를 차지하는 러시아 가스 수입을 대체한다는 계획
- 현재 미국의 LNG 플랜트의 추가 생산 여력이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EU에 대한 추가 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기존 수출물량을 EU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이와 관련, 공동선언문은 미국이 EU 가스 추가 공급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 아시아 등 수출물량을 EU로 전환토록 업체를 설득할 것임을 밝힌 것에 그쳐, 작년 미국의 유사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점 등과 관련한 우려가 제기
 - 미국 가스업계는 수출물량 전환에 날씨 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계약 물량 수입을 고수할 경우, 전환 수출물량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
- 한편, 환경시민단체 글로벌 워트니스는 미국이 약속한 150억m³의 가스는 노르웨이, 아제르바이잔 가스관을 통해 추가 수입할 수 있다고 강조,
 - 이번 합의가 화석연료 인프라 투자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며, 빌딩 등 에너지 효율 제고, 히트펌프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
 - 환경단체 등 비판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풍력 발전 건설 허가 등 행정적 제약, 철강과 시멘트 등 일부 산업의 전기화가 쉽지 않은 점 등에서, 수소 및 바이오메탄 전환의 과도기 에너지원으로 당분간 가스 사용은 불가피하다는 지적

③ EU, 에너지효율지침(EED) 개정안의 에너지 효율 목표 강화 추진

- EU 집행위는 작년 상정된 EU 에너지효율지침(EED) 개정(안)의 에너지 효율 목표를 강화하는 방향의 수정을 검토
 - EU 집행위는 작년 EU의 에너지 총소비 및 실제 최종 소비(에너지 총소비에서 에너지 전환과정의 손실 등을 제외한 실제 소비량)을 2030년까지 각각 39%, 36% 감축토록 의무화하는 에너지효율

지침 개정안을 제안*

- * 현행 EED 지침은 2030년까지 에너지 총소비(primary energy consumption)와 최종 소비(final energy consumption)를 모두 32.5% 감축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음. 현재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집행위 3기관이 지침 개정안에 대한 최종 타협안을 마련을 위해 협상 중
- 집행위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EED 지침 개정안 제안 당시와 현재의 상황에 큰 변화가 발생, 따라서 지침의 에너지 효율 목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 개정안 제안 당시 잠재적 에너지 효율 개선의 경제효과가 기술 잠재력보다 5% 낮아 에너지 효율 투자 대비 경제적 효과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런 상황적 전제가 변경되었다는 것

● 이와 관련, 유럽의회는 2030년까지 EU의 에너지 총소비 45.5% 및 최종 소비 43% 감축을 추진, 집행위의 EED 개정안보다 더욱 강화된 목표를 요구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EED 협상 담당인 엘레오노라 에비 의원은 1% 에너지 효율 개선이 EU의 가스 수입 2.6%를 감축할 수 있다며, EED 개정안의 목표의 강화를 촉구

● 한편, EU의 에너지 효율 제고 및 러시아 에너지 의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산업용 및 발전용 폐열을 활용한 지역난방을 통한 가정 등 건축물 난방이 주목

- 다만, 폴란드의 경우 전체 1,400만 가구 중 6백만 가구가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70%가 석탄을 사용, 지역난방에 여전히 화석연료가 상당부분 사용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 폴란드는 2030년까지 지역난방에서 석탄 사용을 완전히 중단할 방침이며, 미국 LNG, 가스관을 통한 노르웨이 가스 수입을 통해 지역난방에서 석탄을 대체한다는 방침

- 현재 유럽 가정 난방에서 지역난방의 비중은 10% 수준이며, 가장 효율적인 건축물 난방 방식의 하나로 많은 도시들이 지역난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지역난방과 관련, 집행위 EED 개정안은 '효과적인 지역 냉난방시스템'의 요건을 점차 강화함으로써 단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고,

- 열병합 발전소의 경우 1KWh 당 이산화탄소 270g 이상을 배출할 경우 '효율적인 지역 냉난방 시스템'에서 배제, 석탄 및 일부 비효율 가스 병합 발전을 퇴출할 예정

④ EU, 해상풍력발전 보조금 관련 차별적 조치에 영국을 WTO 제소

- EU는 영국의 해상풍력발전 보조금 지급과 관련, 영국 정부가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영국을 WTO에 제소
 - EU는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보조금 지급시 자국 상품을 우대한 영국의 조치가 WTO 핵심 원리인 '내국인 대우 원칙'에 위반하는 차별적인 조치라며 영국을 제소
 - 작년 여름 EU는 영국에 대해 풍력발전 보조금과 관련한 차별적 취급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영국 정부관계자도 EU의 WTO 제소에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고 언급, 이번 EU의 WTO 제소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지적
 - EU의 WTO 제소에 따라, 양측은 우선 사전협상을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할 예정이며, 협상이 무위에 그칠 경우 분쟁해결패널이 해당 분쟁을 법적으로 판단할 예정
 - 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적 협력이 불가결한 시기에 EU가 영국을 WTO 제소한데 대한 유감을 표명, EU와의 법률 다툼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
- 한편, EU가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무역관계 등을 규정한 양자간 통상협력협정(TCA)이 아닌 WTO를 풍력발전 보조금 분쟁해결 채널로 이용한 점이 주목됨
 - 이와 관련, EU가 WTO를 통해 해당 분쟁의 해결을 추진, '영국 vs EU'이 아닌 '영국 vs 교역상대국' 분쟁 구도를 설정함으로써 영국과의 직접 대결을 피했다는 분석

⑤ EU, 농식품 긴급 운송 위한 '우크라이나-폴란드-발틱해 녹색회랑' 설치 검토

-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와의 농식품 긴급 수출입 운송루트 확보를 위해 폴란드를 통과하는 이른바 '녹색 회랑(green corridors)' 설치를 검토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흑해를 통한 해상운송이 불가능해지자, 긴급 물류 운송을 위한 녹색회랑 설치를 요구
 - 이에 EU 집행위는 폴란드 경유 발틱해로 연결되는 녹색회랑 설치를 검토 중이며, 녹색회랑이 적절하게 운영되면 글로벌 식량 위기 우려도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언급
 - 코로나19 확산 초기 물류 병목현상으로 일부 회원국의 식품 공급부족이 발생하자 EU 집행위가 일부 통관 절차를 면제한 녹색회랑을 설치, 긴급 물자를 공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계획

- 폴란드도 녹색회랑 설치에 적극적이거나,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보호 및 지원이 최우선이라는 점과 녹색회랑을 통한 수출입물류에 대한 공격 위험 등을 강조
- 이번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양의 농산품과의 경쟁을 우려해온 EU에게 우크라이나와의 식품 시스템 연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라는 평가
- 한편, EU 집행위는 국제 식품교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국에 (식품 비축) 등 보호주의적 정책을 지양할 것을 촉구한 G7 정상회의 합의내용을 지적, 최근 헝가리의 곡물 수출 제한조치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

⑥ 폴란드, 러시아 석탄 수입 금지 발표

- 폴란드는 29일(화) 국가 안보에 따른 對러시아 석탄 수입 중단 계획을 발표
- EU 정상회의에서 對러시아 가스, 석탄 및 원유 수입 금지 요구가 독일 등 일부 회원국 반대로 수용되지 못하자 폴란드는 독자적으로 석탄 수입 금지를 강행
- 폴란드는 전체 석탄 소비량의 1/5을 수입에 의존, 전체 수입 가운데 75%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러시아 원유 수입 비중도 높은 편
- 폴란드는 EU 집행위가 통상 관련 전권을 보유해 독자적 수입금지 조치가 법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對러시아 제재의 시급성을 주장하며 수입 금지를 강행
- 또한, 폴란드는 같은 날 발표한 2040년 국가에너지정책 개정안에 원유 및 가스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도 함께 발표

⑦ 미국, EU 등 동맹과 러시아 중요 산업에 대한 추가 제재 검토

- 미국과 EU 등 동맹국은 러시아의 군수물자 등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산업 섹터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 중
- 월리 아데예모 美 재무부 부장관은 29일(화) 러시아의 전쟁무기 운영능력 약화 및 러시아의 중요 공급망을 교란시킬 일련의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
- * 앞서 미국은 지난 주 발표한 對러시아 제재조치로, 탄약에서 레이더 등 첨단 산업에 이르는 수십 개 러시아 방산업체의 미국 관할 내 자산 동결 및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대상에 지정
- 러시아 기업 등의 자산동결과 거래금지 등 즉시 효과를 발휘할 조치와 수출통제 등 장기에 걸쳐 영향을 미칠 조치를 융합, 러시아의 전쟁 종단을 최대한 압박할 계획
- 제재조치 존속기간과 관련, 아데예모 부장관은 러시아의 침략 행위가 지속되는 한 러시아에 부과한 모든 제재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

- 현재까지의 성공적인 對러시아 제재가 동맹국간 협력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WTO 등 2차 대전 이후 민주진영이 국제경제금융시스템을 통해 국제 질서, 규범 및 가치를 형성해왔기 때문이라고 평가
- 이와 관련, 중국과 인도에 대해 국제금융시스템 잔류를 기대한다고 언급,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양국의 서구와의 디커플링 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
- 한편, 아데예모 부장관은 작년 합의된 글로벌 최저법인세에 대한 조속한 최종 합의 및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백신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⑧ EU 집행위, 그린워싱 방지 및 소비자보호 위한 일련의 지침 개정안 제안

- EU 집행위는 30일(수) 디지털 제품 등의 '그린워싱(greenwashing)' 및 '계획적 노후화'로부터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두 가지 지침 개정안을 발표
- 소비자가 제품의 내구성 및 수리가능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친환경 상품의 소비를 결정토록 보장함으로써*, EU 그린딜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
- * 집행위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제품 내구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82%는 제품 내구성 및 수리가능성의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한 점을 언급, 내구성 등 정보 제공 의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 이를 위해 집행위는 '녹색전환을 위한 소비자권한 강화' 이니셔티브를 추진, EU의 불공정상관행 지침(UCPD)과 소비자권리지침(CRD) 등 두 개의 지침 개정을 제안

● [소비자권리지침(CRD) 개정]

- 소비자권리지침 개정을 통해 생산자 등에 제품의 내구성 및 수리가능성 정보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제품의 경우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온라인 또는 패키징 등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또한, 광범위한 디지털 제품에 대해 디지털 패스포트가 도입되며, 향후 도입될 제품별 특별 규칙에 A-G 스케일을 통한 등급표시 원칙이 적용됨

● [그린워싱 및 계획적 노후화]

- 적절한 검증기관의 검증 없이 친환경성을 주장하는 이른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공적 기관의 인증 또는 인정이 없는 지속가능성 라벨의 사용이 금지됨
- 이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eco-friendly', 'green', 'eco' 등의 친환경 표시 문구의 사용이 금지되며, 제3자 인증기관 또는 공적 기관의 인증이 없는 자발적 지속가능성 라벨의

사용도 금지됨

- 집행위는 그린워싱 등 방지 규정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불공정상관행지침(UCPD)의 금지된 상관행 리스트(black list)의 개정을 함께 제안
- 또한, 유럽의회의 요구를 수용, 특정 기간 경과 후 소프트웨어 등 성능을 고의로 저하하는 '계획적 노후화(planned obsolescence)' 관련 정보의 제공도 의무화됨

● 유럽 소비자단체인 BEUC는 난무하는 각종 친환경 표시의 정글에서 소비자를 안내할 적절한 입법이라며 집행위의 이번 지침 개정에 환영 입장을 표명

- 다만, 환경시민단체 연합인 유럽환경국(European Environmental Bureau)은 그린워싱 규제 도입으로 제품의 소비자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한편, 집행위는 제품 수리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높은 수리비용, 정보부족, 부품 접근성, 표준화 및 호환성 등 기술적 제약 등을 지적, 오는 4월 5일까지 제품 수리가능성과 관련한 일반인의 의견을 접수,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할 예정

⑨ EU 이사회, IPI 규정 최종 승인...5~6월 경 유럽의회 승인 후 발효

● EU 이사회는 공공조달 시장의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국제공공조달규정(IPI)을 승인

- IPI는 EU 기업의 자국 공공조달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제3국 소재 기업의 EU 조달시장 입찰을 제한하거나, 입찰 조건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내용
- EU 이사회는 지난 3월 IPI 규정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 30일(수) 법안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오는 5~6월 유럽의회 본회의 최종 표결 승인 후 발효

● 법안은 EU 및 회원국의 1,500만 유로 이상의 인프라 구축 등 도급계약, 500만 유로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 납품계약 등 공공조달 사업에 적용됨

- EU 이사회가 최종 승인한 IPI 법안의 주요 쟁점이던 각 회원국의 EU 집행위 IPI 관련 결정 이행 거부권은 최종적으로 배제되었으며,
- IPI 규정 적용 면제 대상은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이 부여된 국가 가운데 우선 최빈국을 면제하고 향후 면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

⑩ 러시아, 일부 상품 병행수입 허용 법안 채택

- 러시아 정부는 30일(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된 제품을 권리자의 승인 없이 수입토록 허용하는 이른바 '병행수입(parallel imports)' 법안을 채택
 -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서방 제재에 대한 러시아 경제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비우호국을 포함, 러시아로의 병행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러시아로의 상품 유입을 원활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
 - 러시아 경쟁당국은 2009년 자동차, 의약품 및 사치품 등 각종 글로벌 브랜드의 병행수입 허용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서방의 제재를 계기로 이를 단행한 것
 -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조만간 병행수입 대상 상품 리스트를 확정 발표할 예정

⑪ EU, 식량안보 우려에 EU 그린딜 농식품 분야 세부정책 추진 잠정 중단

- EU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안보를 이유로 EU 그린딜의 농식품 분야 주요 전략인 'Farm-to-Folk (F2F)'의 세부정책 추진을 잠정 중단할 방침
 -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보건담당 집행위원은 3월 31일(목) 유럽의회 농업위원회에서 F2F 전략 목표를 계속 유지하되 당분간 세부정책 추진을 잠정 중단할 계획을 언급
 -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품 가격급등, 비료와 연료 등 주요 원자재 부족 등 EU와 인접국의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 EU는 이미 전쟁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논란이 되었던 일부 생태보호지역의 경작을 허용하는 등 일련의 중단기 대응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비료 가격 급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질산비료 규제 완화를 검토 중
- 한편, 키리아키데스 집행위원은 식량안보 우려에 따른 F2F 세부정책 추진의 잠정 중단에도 불구하고, EU 그린딜 및 F2F의 전략적 목표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
 - 특히, F2F 전략 목표가 미래 EU의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따라서 긴급 식량안보 대응조치와 별도로 F2F 정책 목표는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입장
 - 이와 관련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F2F 전략의 재검토 또는 완화 등 EU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 정책의 수정을 요구
 - 반면, 환경시민단체 등은 지속가능성 목표가 식량안보에 의해 희생되어서는 안 되며, 지속가능성 강화를 통한 EU 농업의 장기적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

⑫ EU, 중국과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지원 자재 촉구

- EU는 1일(금) 중국 시진핑 주석과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 중국의 영향력을 통한 러시아에 대한 전쟁 중단 압박 및 러시아의 제재 회피 지원을 자제할 것을 촉구
 - 정상회담은 위그루 소수민족 인권침해와 관련한 EU와 중국간 상호제재, 대만과 관련한 리투아니아-중국 통상 갈등 등 양자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 최근 미국과 EU 정부관계자가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를 언급, 중국의 러시아 지원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되는 것
- 이에 EU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해 러시아 군사지원을 자제하고, 최소한 러시아의 서방의 제재조치 우회 회피를 지원하지 않도록 요구
 - 최근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을 '절친'으로 언급하고, 금주 개최된 러시아-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중국이 러시아와의 양자간 협력관계 확대를 언급하는 중국의 러시아 지원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할 것으로 보이며, 정상회의 이전 양측 외무장관급 사전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점 등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양자간 중요한 합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
- 한편,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의견 접근을 위해 EU가 중국에 대해 일부 무역장벽을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
 - 랑게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6월 양자간 회담을 통해 통관 절차 간소화, 공산품 표준 완화 등 일부 무역장벽을 완화할 수 있으나, 다만, 이를 위해 중국이 유럽의회 의원들에 부과한 제재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

⑬ EU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 역외보조금 규정 타협안 제시

-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는 EU 역외보조금 규정에 관한 타협안을 제시, 임기중 회원국간 법안 합의에 주력
 - EU 시장의 공정한 경쟁체제를 왜곡하는 제3국 정부의 보조금에 대해 과징금, 특정 비즈니스 행위 제한 등 제재를 부과, 보조금의 시장 왜곡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
 - 프랑스의 타협안은 회원국의 EU 집행위 통보 대상 보조금 기준 제한 등 회원국의 행정적 부담 경감, 집행위의 불법보조금 조사 기간 18개월로 제한, 보조금 불법성 테스트* 규정 명확화 등을 수정한 점이 주목됨

* 보조금 불법성 평가시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를 비교하는 이른바 '밸런싱 테스트(balancing test)'가 도입되며, 일부 회원국은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를 요구

- 반면, 규정이 적용되는 보조금 범위는 규정 발효 10년 전부터 지급된 보조금이 포함됨 (프랑스 초기 타협안은 7년, 포르투갈, 몰타, 사이프러스 등은 3년을 주장)

● 유럽의회도 빠르면 오는 5월 경 본회의에서 표결로 규정에 대한 의회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이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기관간 협상(trilogue)이 개시됨

II EU 환경규제 뉴스 – KIST EUROPE 제공

① 유럽집행위원회, 불완전(inactive) REACH 등록 건 등록서류 대상 유효기한 도입 고려

● 유럽집행위원회는 REACH 등록(Registration) 건들 중 물질정보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거나, 장기간 최신정보 갱신(update)이 진행 되지 않는 등록서류들에 대하여 집행 조치뿐만 아니라 '등록서류 유효기한(dossier expiry dates)'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유럽집행위원회와 ECHA는 3월 17일 진행된 CARACAL(Competent Authorities for REACH and CLP, REACH 및 CLP 관할당국회의) 임시 회의에서, REACH 등록서류 대부분에서 요구사항 부족 문제가 만연하고 있으며, 등록 물질의 최신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러한 조치를 제안하였다.

[KBA Europe 홈페이지 세부내용 바로가기](#)

② ECHA, MWCNTs(multi-walled carbon nanotubes) 발암성 분류 동의

● ECHA의 위해성평가위원회(Risk Assessment Committee, 이하 RAC)는 3월 22일, 나노튜브를 포함한 다중벽탄소튜브(multi-walled carbon nanotubes, 이하MWNCTs)에 대하여, 석면섬유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므로 EU CLP(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흡입성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것에 동의했다.

[KBA Europe 홈페이지 세부내용 바로가기](#)